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연계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1.11.05(금) 13:00~15:00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P



주최/주관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 식생활교육부산네트워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연계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일시 2021.11.05(금) 13:00~15:00 **장소**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5층 혁신홀P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연계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목차

행사일정	02
개회사	03
발제	07
토론	29

행사일정

시 간	주요내용	발표자
13:00 ~ 13:20	개회식	
13:20 ~ 13:50	발제 1) 지역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인우 대표 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발제 2)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박석환 과장 부산시 복지정책과
13:50 ~ 14:40	지정토론	좌장 : 이경애 교수 부산교대
	토론 1) 푸드플랜의 먹거리 보장 사업 활성화 방안	김재철 위원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
	토론 2) '온마을사랑채' 사례를 통한 지역사회 먹거리돌봄의 활성화 방안	한진숙 교수 동의과학대
	토론 3) 공유공간 '만덕어울락'의 돌봄 사업 사례와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제안	정신모 관장 만덕종합사회복지관
	토론 4) 마을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제안	전우철 대표 마을부엌 정지
	토론 5) 지역사회의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한 먹거리돌봄 활성화 제안	이정민 이사 한살림 부산
14:40 ~ 14:55	종합토론	
14:55 ~ 15:00	정리 및 폐회	

개회사

개 회 사



정 현 찬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현찬입니다.

국민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먹거리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부산광역시와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해 노력해 주신 부산광역시의회 김광모 의원님, 식생활교육 부산네트워크 이효정 대표님 외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들의 먹거리 보장 강화를 위해 농특위는 지난 2월 ‘국가식량계획’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 국가식량계획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보장 실현’을 기본방향으로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먹거리 지원 확대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위 농수산식품분과는 올해 지역사회 중심의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주요의제로 선정하여 정책연구용역, 전문가간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현장의견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 ‘푸드플랜’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먹거리 중심의 지역사회 돌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올해 부산에서 선제적으로 수립한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은 지역사회 자립을 통한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복지정책과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먹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하는 공동체의 연결고리로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활성화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에서 활동하고 계신 현장 활동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부산시가 모범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지역사회 돌봄 사업 중 식사·영양관리 사업 사례를 공유하고, 전국적으로 먹거리를 중심으로 한 돌봄 정책이 확산되었으면 합니다.

지역사회 중심의 먹거리 돌봄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오늘 토론회가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도 참여해 주신 발제자, 토론자와 온라인으로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발 제

지역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이인우(사회적경제지역화연구소 대표)

I. 개요

농특위의 주요 사업 중 하나인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연구용역이 2020년에 완료되었다. 모든 사항을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없었지만 기본 영역과 핵심 정책이 담겨 있다. 지역 푸드플랜도 100개가 넘는 지자체에서 수립되었다. 지자체의 먹거리 기본조례도 40여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이제 먹거리 의제는 새로운 단계로 이행하고 있다. 지역 푸드플랜과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연구용역 결과는 하나의 사회적 유기체로서 유기적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농특위와 지역 먹거리 시민들은 연구용역 결과와 지역 푸드플랜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 실행 현장에서 조정이 필요한 내용, 앞으로 추가할 내용을 조율하고 더 나은 내용으로 먹거리 의제와 과제를 발전시켜 나가는 유기적 활동이 중요해졌다.

이 자료는 지역 푸드플랜이 통과하게 될 진화 경로를 예상해보고, 그런 경로 안에서 여러 가지 선택안 중 어떤 선택안을 선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에 대한 구상을 과제로서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이 자료는 부산 통합돌봄의 활성화 토론회를 계기로 작성된 것으로, 지역 푸드플랜이 지역 통합돌봄 정책과 어떻게 결합될 수 있고 어떤 기대 속에서 어떤 과정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할 것인가의 관점에서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 과제의 중심 내용은 지역사회 먹거리 돌봄의 방향과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 제도 측면에서 푸드플랜과 돌봄은 서로 다른 주체, 자원, 접근 방법이 요구되는 영역이며 분리된 정책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돌봄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미 복지, 행정, 국토, 농업 관련 정부 부처들의 합동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정책도 통합적인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돌봄은 서비스

의 최종 도달점이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정 지역을 선택하여 시행되는 지역특정정책과 달리 더 통합적일 수밖에 없는 정책이 되고 있다. 이런 흐름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푸드플랜과 돌봄 영역에서도 곧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자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과 푸드플랜이 유기적으로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가정 아래, 그 과정에서 ‘먹거리 돌봄(food care)’의 특징을 활용하여 통합돌봄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는 데 지역사회가 어떤 과제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안하고자 한다. ‘먹거리 돌봄’이라는 용어는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그 특징을 명료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이 자료는 미국 농무부(USDA) 먹거리영양국(FNS) 소관 정책 중 먹거리 돌봄 관련 정책인 아동성인돌봄먹거리정책(CACFP)을 토대로 먹거리 돌봄의 특징과 그로부터 나타나는 정책 목표-수단의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 자료의 내용 구성은 먼저 지역 푸드플랜의 현황과 진화 경로를 조망한 후, 먹거리 돌봄의 특징적 추세를 인식, 정책, 활동 측면에서 소개하고, 우리 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지역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과제로 제안하는 순서를 따르고자 한다.

II. 지역 푸드플랜의 현황과 진화 경로

현대사회 푸드플랜(Food Plan) 정책은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전의 푸드플랜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국민 식량의 절대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 즉 식량안보에 집중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의 먹거리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과 국가가 공동 주체가 되어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정책목표로 삼고 정책수단으로는 국경 내 먹거리 체계(food system)를 통제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이처럼 먹거리 정책의 주체, 목표, 수단이 변화된 데에는 현대사회에서 먹거리 불안이 전쟁·재해·글로벌 수급 차질 같은 비상시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다양한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고, 해결 방법도 국가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없으며, 인권과 주

권 충족의 관점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커다란 국민적 공감대를 얻게 된 배경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푸드플랜 정책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때는 1990년대 말 학교급식 개선운동부터였다. 그 요구는 2000년대 초반부터 학교급식 법과 조례 제정 운동, 2010년대에는 친환경무상급식운동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학부모, 소비자, 생산자, 시민운동, 정부가 현대사회의 먹거리 기본권 의제를 가운데 두고 논의를 거쳐 정책을 도출하는 먹거리 정책 거버넌스(governance) 체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런 결과는 2010년대 중반부터 이어진 지자체와 국가 푸드플랜 수립 동향으로까지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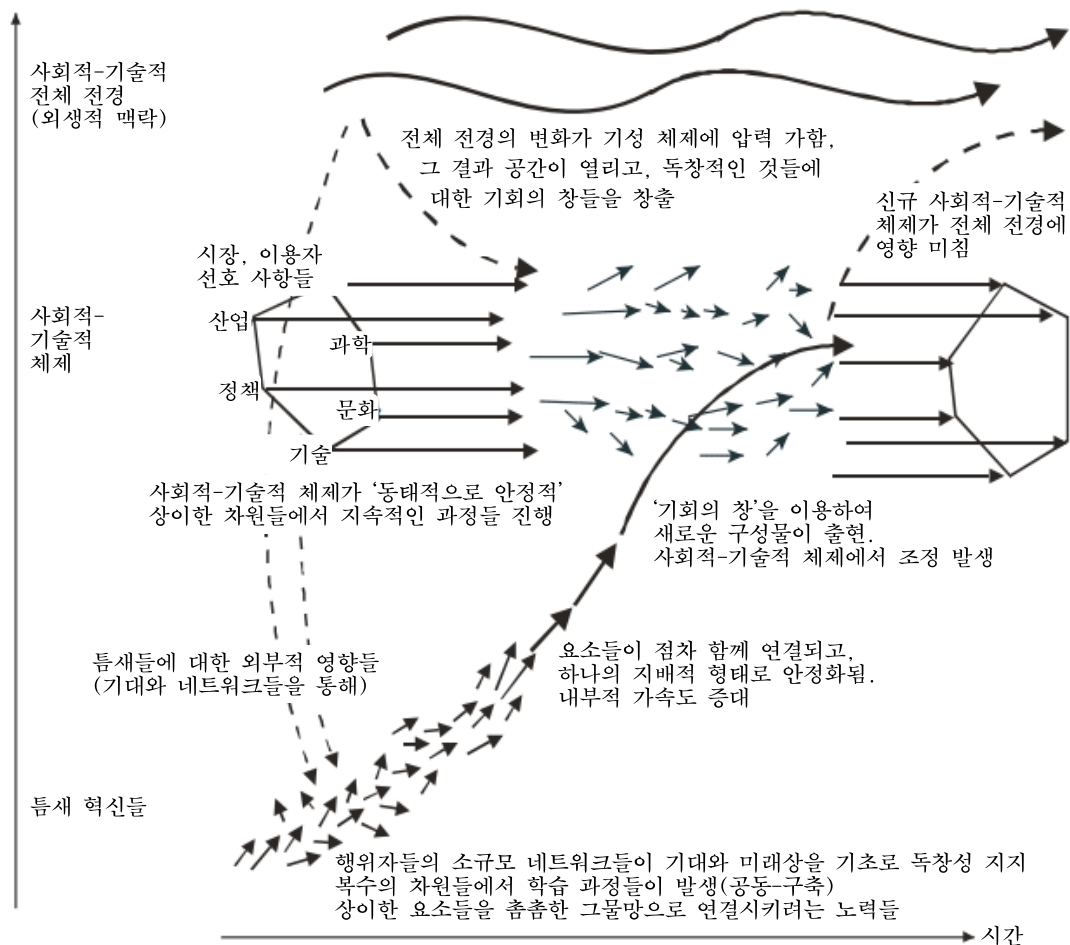
2021년 현재 우리나라 푸드플랜 수립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 수준에서는 정부의 『국가식량계획』(2021.9.16.)이 발표된 바 있고, 아직 명시적인 푸드플랜으로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가 연구용역을 통해 정리한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2020.12) 결과물이 있다. 지자체 수준에서는 총 110개 지방자치단체(기초 95, 광역 15)가 푸드플랜을 수립했고, 먹거리 기본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4개(기초 37, 광역 7)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수립 비율은 광역지자체 88.2%, 기초지자체 42.0%로 나타난다. 기본조례는 광역 41.2%, 기초 16.4% 지자체에서 제정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구성요소들과 생태계가 하나의 실체를 갖춘 제도적 섹터(sector)로서 작동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신규 정책 섹터의 출현과 발전과정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 정책 섹터 역시 개인(social movement), 조직(organizational ecology), 제도(institutional regime) 차원이 내부에서 수직적 정합성을 추구하는 상호작용과 외부에서 수평적 정당성을 추구하는 상호작용을 통해 세대적 진화경로를 빠르게 거쳐 나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1은 내부의 수직적 정합성 추구 상호작용을 개념도로 보여주는 다차원 이행 가설(MLP : Multi-level Perspective)이다. 그림 2는 외부의 수평적 정당성 추구 상호작용을 개념도로 보여주는 통합적 섹터 진화 가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들 가설 중 그림 1은 다양한 동기와 방향에서 전개된 사회운동으로 출발한 정책 섹터가 기성 실행조직들 및 기성 제도들과 수직적 상호작용을 겪으며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창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정책 섹터의 진화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런 내용을 푸드플랜 정책 섹터에도 적용해보면, 푸드플랜 정책 섹터 역시 다양한 동기와 방향에서 출발한 사회운동을 기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운동, 조직,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부조화는 곧 상호작용을 통해 해소될 수 있고, 또 새롭게 열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나가며 새로운 세대의 푸드플랜으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 있다.

그림 1. 신규 정책 섹터의 수직적 상호작용과 진화과정에 관한 가설(MLP)

국지적 관행에서
활동들의 구조화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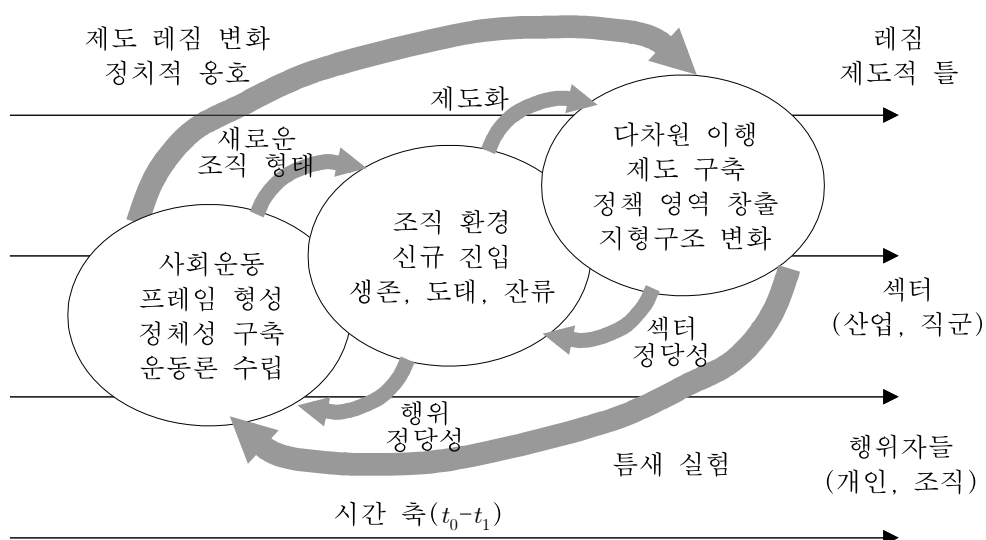


자료 : Geels & Schot(2007: 401)

아울러, 그림 2의 통합적 섹터 진화 가설은 출발점과 정책수단이 다른 정책 섹터들조차도 상호간에 삼투압과 같은 제도적 융합과정을 통해 각각의 정책 섹터가 새로운 세대의 정책 섹터로 진화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푸드플랜 정책과 통합돌봄 정책이 비록 출발점과 정책수단이 다를지라도 공동의 관심 영역이 존재하고 그 영역에서 제도 간에 상호작용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정책 섹터에게 새로운 세대의 정책 섹터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창을 활용하게 해준다는 점을 기대하게 한다.

이러한 내용은 먹거리 기본권 운동 측면에서 양면적인 함의를 갖는다. 하나는 이제까지 먹거리 운동을 전개하여 겨우 지자체 푸드플랜과 기본조례를 수립하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벌써 그 내용을 변화시켜야 하는가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변화에 적응하려고 하는 경우, 어떤 기회의 창을 선택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할 것인가를 모색하도록 할 수 있다. 다음 장은 이러한 우려와 모색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도록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이라는 신규 제도 섹터가 어떤 인식, 정책, 활동과 수직적 및 수평적 상호작용을 이미 벌이기 시작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신규 정책 섹터의 수평적 상호작용과 통합적 섹터 진화 가설



자료 : Hassink et al.(2014: 4).

Ⅲ. 지역 푸드플랜의 발전 방향과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한 제안

신규 정책 섹터로서 푸드플랜 정책은 내부에서 수직적 정합성 추구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다. 그 내용을 인식, 정책, 활동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먹거리 기본권에 대한 인식이 사회운동, 실행조직, 제도구성 측면에서 심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 수준의 식량안보 계획을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이라고 생각했던 초창기 단계에서 이제는 영양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먹거리 기본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는 포만감 있게 먹을 뿐 영양소의 균형이 갖춰져 있지 않은 먹거리를 섭취하고 있는 인구를 먹거리 불안 계층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먹거리 불안 계층을 새롭게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연쇄적으로 정책 수단에 변화를 초래한다. 영양이 불균형한 식사를 할 수밖에 없는 계층이 발생하는 원인은 먹거리 체계(food system)의 문제에 있다고 파악된다. 그에 따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의 정책 목표는 영양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이 되고 정책 수단은 먹거리 체계를 통제하는 활동으로 된다. 먹거리 체계를 통제하는 계획이 바로 푸드플랜으로 개념화되는 것이다.

다음은 활동의 변화로 이어진다. 먹거리 체계가 그런 영양 불균형 계층을 유발시키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에는 지역 내 먹거리 시스템의 순환체계가 단절되었던 배경이 놓여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지역 내 먹거리 시스템이 글로벌 농식품 기업체의 침투로 인해 지역 내 생산, 가공, 유통, 소비, 자연 환원 순환체계에 손상을 입게 되면, 지역 내 생산자 주권과 소비자 주권이 위축되고 지역 내 먹거리 자급력까지 위축되는 악순환 과정에 접어들게 된다. 따라서 푸드플랜이 지향하는 주요 활동은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복구하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그 목표는 지역 내 먹거리 주권, 인권, 문화적 선택권, 시민권으로 구성되는 먹거리 기본권을 되찾는 것이 된다. 이런 활동은 지역 내 먹거리 시민권자들이 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푸드플랜을 통제하는 주체가 먹거리 시민들이 되고 통제 거버넌스도 먹거리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해진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의 식량안보 중심 푸드플랜은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게 된다. 국민 먹거리 불안은 전쟁, 재해, 수급 불안 같은 비상 상황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지역 내에 영양 불균형을 유발하는 먹거리 체계가 조성된다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재개념화된다. 그리고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국가 차원에서 식량을 절대량으로 풍족하게 확보하는 것 보다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복원하는 것 더 공(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에서 이와 같은 지역 푸드플랜 정책 섹터의 내부 수직적인 제도 정합성 추구 연쇄 상호작용은 이제 지평을 넓혀 외부 정책 섹터, 예를 들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섹터와 다시 정당성을 추구하는 상호작용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외부적 정당성 추구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난다.

지역 푸드플랜은 영양 불균형으로 대표되는 먹거리의 불안에 처하지 않을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섹터인데 비추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섹터는 그 세부 정책수단 중 하나로 먹거리 돌봄 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통합돌봄 중 먹거리 돌봄 대상자는 복지정책 섹터의 전통적인 방법을 따라 선별된다. 그 선별 방법은 먹거리 불안이 개인 차원에서 발생하고, 생애주기의 특정 기간에 나타나며, 일시적인 상태보다 영구적으로 굶주림에 취약한 상태의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리고 주요 정책 내용은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구성된다. 이에 비추어 기존의 정책 섹터에 신규로 진입한 지역 푸드플랜 먹거리 돌봄 정책은 별도의 정당성있는 영역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푸드플랜의 먹거리 돌봄 대상자 구분 기준은 먹거리 불안이 가족을 단위로 발생하고, 특정 생애주기보다 평생 동안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며, 반드시 영구적인 상태이기보다 일시적으로 누구나 겪을 영양 불균형 상태의 것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주요 정책 내용은 가족과 생활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생활 통합적 방향으로 구성된다. 다른 정책 섹터와도 수평적 정체성 추구 상호작용이 발생하지만, 최소한 통합돌봄 정책과의 상호작용은 서로에게 세대적 진화 과정에 진입할 수 있게 해주는 기회의 창을 제공하게 된다.

정책 섹터 간 정책수단의 상호작용은 정책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친다. 미국 농무부(USDA)에는 먹거리영양국(FNS)이 있고, 소관 정책 중 먹거리 돌봄 관련 정책으로 아동성인돌봄먹거리정책(CACFP)이 있다. 이 정책은 복지 차원의 먹거리 돌봄을 대체하거나 동일한 항목을 중복해서 지원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정책은 영양 불균형 상태의 먹거리 불안 가족에게 먹거리 영양 불균형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충적 성격(supplemental)의 먹거리 돌봄 정책을 제공한다. 정책의 설계 원리는 가족 단위로 발생하는 먹거리 불안에 대해 가족 단위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그 자녀들에게 돌봄 먹거리를 보충적으로 제공한다는 것이다. 보충적 돌봄 먹거리 지원 대상자로서 먹거리 불안 가족, 아동, 성인은 18개 설문항목 중 3개 이상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의 가족, 아동, 성인이 해당되며, 직접 지원 대상자는 아동과 성인이다.

아동에 대한 돌봄 먹거리 정책 중 특별한 항목은 여름방학먹거리지원정책(SFSP)로서 18세 이하 저소득층 아동이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름방학 특별(또는 방과후) 청소년프로그램, 캠프 등을 개설하는 지역의 비영리 공공·민간단체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여기에 아동·성인돌봄먹거리정책(CACFP)은 아동돌봄센터, 가족데이케어홈, 방과후프로그램, 성인돌봄센터 중 아동, 노인, 장애인에게 식사 및 간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현금을 지원한다. 끼니당 25센트에서 2.8달러를 보조하고 있으며, 2016년 기준 하루 430만 명의 어린이/성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원 절차는 농무부 식품영양국이 주정부에 재정을 지원하고, 주 교육기관에서 주로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Ralston et al., 2017; 이계임 외, 2017).

이 사례에서 특징적인 사항은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먹거리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정규 학사일정 이외의 시간에도 돌봄 먹거리를 지원할 수 있게 급식단체가 아닌 단체에게 서비스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 공동체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비용을 변제해준다는 점이다. 이런 제도는 통합돌봄의 지정 시설 중심 먹거리 돌봄 수행 방식에 비해 가족, 생활, 공동체, 단체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는

점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대외적 정당성 추구 상호작용 영역이자 지역 사회 통합돌봄 활성화에도 기회의 창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 섹터 간 활동의 상호작용은 영국에서 코로나 19 감염병 대유행기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 중 한 곳은 코로나 19 감염병 대유행기 동안 영국 정부가 장기적 푸드플랜을 이행하는 데 실패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보도했다(2020년 4월 23일). 그 기사는 “비상시에 대형 유통업체와 복지 전달체계가 알아서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푸드플랜인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경직된 푸드플랜은 코로나 19 대유행 시기에 먹거리 공급체계의 구조조정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이어서 식량 분야에는 단기적 비상 상황에 대처하고, 장기적 위험을 대비한 먹거리 계획이 필요한데, 영국 정부가 코로나 발생 초기 대응에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했다. 정부는 경제 폐쇄 시,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대응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상은 정부가 국가의 정치적 책임에만 집중함에 따라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장, 공장, 상점의 노동 흐름을 중단시켜 버렸다고 지적했다.

정부 푸드플랜에 대한 기대와 실망은 2년여의 브렉시트(Brexit : 유럽연합 탈퇴) 협상 과정에서 비상 푸드플랜이 마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정부가 보여준 것은 기대했던 푸드플랜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가 문제를 정리해줄 것이라는 안이한 믿음밖에 없었다는 것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식품법을 통한 해결 방식은 비상시 민간 식품 서비스 부문을 폐쇄하도록 하고, 기성 케이터링 기술, 시설, 입지를 무용지물로 전락시키며, 기성 지역 먹거리 유통체계를 중단시킴으로써 농산물 폐기량을 증대시켰고, 그 과정에서



정부는 독재에 가까운 시장 조정을 단행했다. 결국, 식품 유통을 소수의 유통업체와 푸드뱅크에 집중시켰지만, 유통업체는 대중의 필요에 맞게 공급을 조정하기보다 여전히 자신의 시장점유율의 확대에만 치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영국의 식품 정책과 계획은 먹거리가 “공공재”라기보다 시장을 통해 가장 잘 배달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답습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혹평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에 대한 기사 내용은 복지 및 수급 정책수단처럼 지역사회의 노동, 유대, 관계, 시설, 기술, 입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먹거리 돌봄 체계가 지역사회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먹거리 순환 체계를 복원시키려는 푸드플랜 정책 섹터와 정당성 측면에서 상호작용을 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지역사회의 먹거리 순환 체계를 복원하는 것이 영양의 균형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을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더 효과적임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참고할 수 있다. 미국에서 먹거리 접근성과 공동체 건강 사이의 관계를 검증한 한 연구에 따르면, 카운티(county) 수준에서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여겨지는 8개 항목의 접근성 변수(지역먹거리(local foods), 외부유입먹거리, 건강유의활동, 쾌적한 환경, 해당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징, 사회적 자본, 생활지원센터, 보건시설)와 지역사회의 비만, 당뇨, 조기사망률 통계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로컬푸드 접근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비만, 당뇨, 조기사망률이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했다(Deller et al., 2017). 다른 변수들은 관계가 복잡적이거나 미미한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는 외부유입먹거리 접근성 변수처럼 먹거리가 풍부한 경우, 또는 생활지원센터나 보건시설 접근성이 높은 경우보다 오히려 지역사회 먹거리 순환체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방안이 지역사회 건강에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점을 시사해준다. 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섹터와 지역 푸드플랜 정책 섹터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활용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서로 활성화되는 기회의 창을 공유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하게 한다.

요컨대, 지역 푸드플랜의 내부 수직적 정합성 추구 상호작용과 외부 수평적 정당성 추구 상호작용은 신규 정책 섹터로서 지역 푸드플랜의 먹거리 불안 인식을 다양하게 심화시켜주고, 불안 해소 목표를 영양 균형 측면에서 차별받지 않을 먹거리 기본권 보장으로 구체화시켜주

며, 정책 수단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회복시키는 방향을 채택하게 해주며, 활동은 보충적 돌봄 먹거리 지원을 위한 공동체 단체와 센터들의 참여를 활성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해줄 것이라고 전망하게 해준다. 이 과정에서 보충적 돌봄 먹거리 지원 위주의 인식, 정책, 활동은 지역 먹거리 시민 양성, 공유부엌, 공동체 셰프 같은 새로운 돌봄 먹거리 지원 체계와 결합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IV. 농특위와 지역 먹거리 시민의 역할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즉 푸드플랜의 진화와 기회의 창은 거버넌스 구조를 통해 결실을 맺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농특위의 활동과 지역 먹거리 시민의 역할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브라질이 국가 수준 및 지역 수준에서 구축했던 먹거리 및 영양 보장 거버넌스를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그런 거버넌스의 의제 중 하나로 미국 농무부의 먹거리영양국 조직 편제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미국 농무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접근방법 역시 음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농특위의 활동과 지역 먹거리 시민의 역할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전략을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 농특위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에 완료했다. 이제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연구용역에 이어 그 전략이 지역 푸드플랜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모색하는 활동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전략이 마련되지 않았던 시점에서는 분산된 주제들을 단순히 조사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만, 이제 전략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쳤기 때문에 그 전략 안에서 지역 푸드플랜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활동은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의 체계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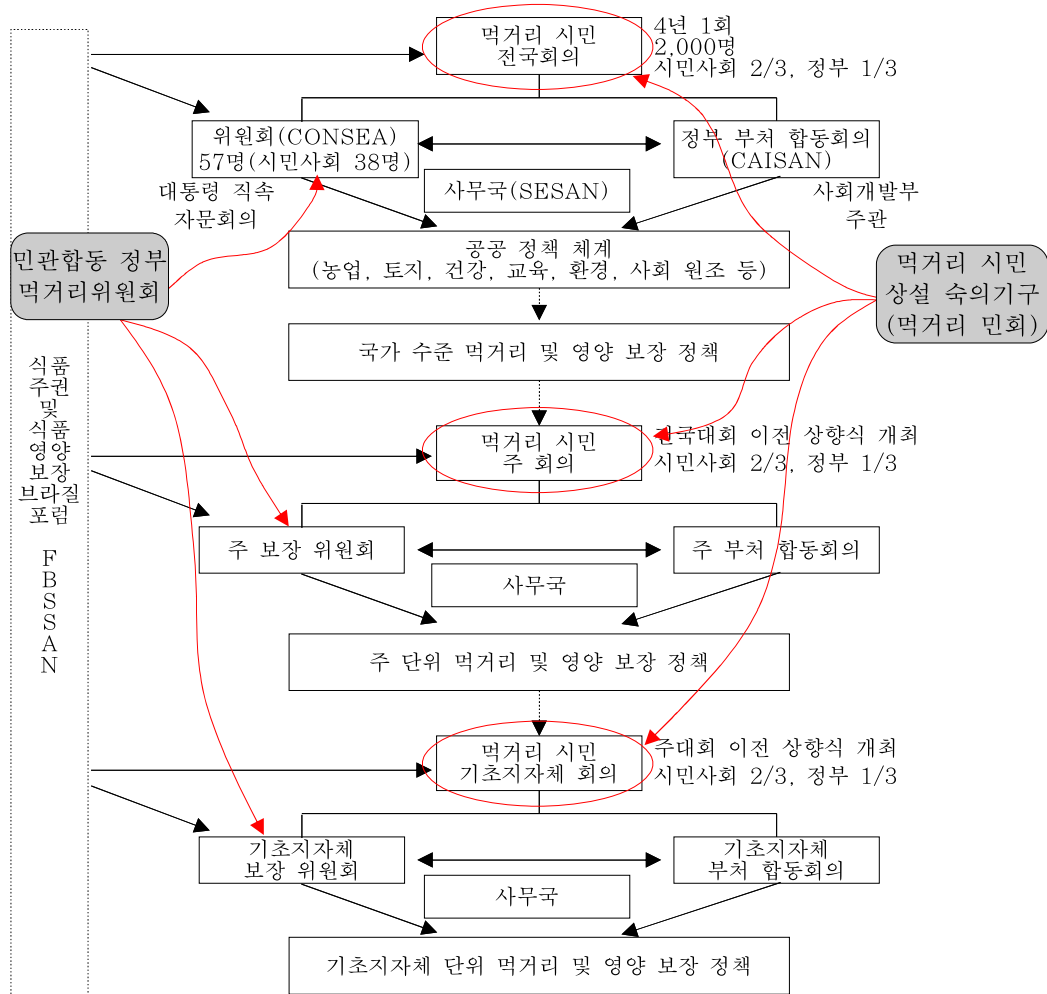
지역 먹거리 시민의 역할은 시민권자들로서 지역 먹거리 체계를 통제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시민이라는

용어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만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민이라는 용어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농민도 먹거리 시민이며 시민권자로서의 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 시민이란 먹거리 기본권과 관련된 공적인 의제에 대해 공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분담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지역의 먹거리 체계를 통제하여 시민의 주권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Lozano-Cabedo & Gómez-Benito, 2017). 지역 먹거리 시민은 먹거리 불안이 발생하는 원인을 지역 먹거리 체계의 순환구조를 회복시킴으로써 해결해 나가는 형태의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지역 순환구조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농특위와의 협력도 중요하다.

브라질에서는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에서 먹거리 및 영양 보장 거버넌스를 아래와 같이 구성했다. 먹거리 시민의 거버넌스를 각급 정부 단위마다 2점으로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나는 그림 3의 왼편과 같이 민관합동으로 각급 정부 내에 먹거리 및 영양 보장 위원회를 구성했다. 다른 하나는 그림 3의 오른편과 같이 민간으로만 구성된 먹거리 시민 상설 숙의기구를 임기제로 구성했다. 우리 용어로 표현하자면, 먹거리 민회라고 할 수 있다. 이들 조직은 민관합동 위원회가 제도화된 의제를 다루는 거버넌스 구조인데 비추어 먹거리 시민 상설 숙의기구는 아직 제도화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새롭게 관심을 모으는 의제를 다루는 거버넌스 구조로서 서로의 역할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먹거리 시민 상설 숙의기구가 민관합동 위원회의 모(母) 조직체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민간 위원을 파견하는 역할을 했다. 위원회의 민간 위원을 정부에서 선별할 경우,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 위원을 스스로 선발하겠다는 의지였다. 다음으로 먹거리 시민 상설 숙의기구는, 우리의 경우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로컬푸드에 대한 정책이 각 지자체마다 지자체장 또는 지방자치 의회의 정파에 따라 상이하게 결정되어 인접한 지자체 주민들이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제한을 받을 때, 상설 숙의기구가 정책의 내용을 통일하도록 민간에서 숙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압력 기구 역할을 수행했다. 우리의 경우, 다른 예를 들자면, GMO 또는 GEO 식품이 공적 영역

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와 같은 논의는 위원회가 직접 맡기 보다 사회적 공론장으로서 상설 숙의기구에서 맡을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상설 숙의기구는 위원회가 제도권의 장벽 안에 갇혀 제한된 의제만 다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장벽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유롭게 의제를 발굴하는 회의를 직접 민주주의 민회의 형태로 정기 개최했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 및 지역 푸드플랜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Leão & Maluf, 2012); Santarlli et al., 2018).

그림 3. 브라질 국가 수준과 지역 수준
먹거리 및 영양 보장 거버넌스 구축 사례 개념도



자료 : Leão & Maluf(2012); Santarlli et al.(2018)

다음은 정책의 집행 체계에 관한 사항으로 미국 농무부의 직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은 신규 정책 섹터이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을 전담할 조직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의 농무부는 먹거리영양국이라는 국단위의 조직을 편제하고 있다.

아울러, 미국 농무부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접근방법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충적 돌봄 먹거리 정책이라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왔다. 독자적 정책 영역은 영양 균형 먹거리 지원과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먹거리 불안 문제 해결 분야에서 확장과 심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런 사항은 농특위와 지역 먹거리 시민의 대정부 거버넌스 의제로서 그리고 먹거리 시민의 새로운 세대적 진화 방향 의제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이상으로 국가와 지역 수준 푸드플랜의 현황 및 진화 경로를 조망한 후, 신규 정책 섹터로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섹터의 수직적 및 수평적 발전 추이를 소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지역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과제를 조심스럽게 지역 먹거리 돌봄 추진 과제 측면에서 제안하고자 노력했다. 먹거리 기본권 정책 섹터와 통합돌봄 정책 섹터의 제도적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지역 먹거리 돌봄 추진 과제는 영양 불균형 관점에서 기본권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한 목표를 지향하며, 정책 수단은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구상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해외 사례 중 지역 내 노동, 유대, 연대를 단절시키지 않는 푸드플랜의 기대와 시사점을 참고한다면, 지역 먹거리 돌봄은 생애주기정보다는 생활 속의 먹거리 불안 해결을 지향하고, 외부유입 먹거리보다 로컬푸드를, 전문 복지단체만이 아니라 지역 단체, 사회적경제 조직체, 공동체 센터들을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농특위와 지역 먹거리 시민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역할이 중요하다. 이 자료에서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먹거리 시민의 거버넌스 구조를 2점으로 구축하고 먹거리 민회 같은 먹거리 시민 상설 숙의기구의 구성에 성공했던 브라질의 사례를 소개했다. 또한 신생 정책 섹터인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책 섹터를 전담할 정부의 직제로서 미국 농무부 먹거리영양국 사례, 그리고 정책 접근방법으로 보충적 돌봄 먹거리 정책 영역의 확장 및 심화 내용을 함께 공유했다. 먹거리 시민의 양성과 활동을 기대하며 글을 맺고자 한다.

참고 자료

- 이계임 외. 2017. 『정부의 취약계층 농식품 지원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황영모 외. 2020.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연구』.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연구용역 최종보고서).
- Geels F.W, Schot J. 2007. "Typology of sociotechnical transition pathways." *Research Policy* 36: 399-417. Doi:10.1016/j. respol.2007.01.003
- Hassink, Jan, Willem Hulsink, John Grin. 2014. "Farming with care: the evolution of care farming in the Netherlands." *NJAS-Wageningen Journal of Life Sciences* 68: 1-11.
- Leão & Maluf. 2012. *Brazil's experience of building a-food-nutrition-security System*. Abranda and Oxfam.
- Lozano-Cabedo, Carmen and Cristóbal Gómez-Benito. 2017. "A Theoretical Model of Food Citizenship for the Analysis of Social Praxis." *Journal of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Ethics* 30: 1-22.
- Ralston, Katherine, Katie Treen, Alisha Coleman-Jensen, and Joanne Guthrie. 2017. *Children's Food Security and USDA Child Nutrition Programs*. EIB-174,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Santarlli, Mariana, Luciana Marques Vieira, and Jennifer
Constantine. 2018. *Learning from Brazil's Food and
Nutrition Security Policies*.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Steven Deller, Amber Canto & Laura Brown (2017): Food
access, local foods, and community health, Community
Development, DOI: 10.1080/15575330.2017.1358197

인터넷 기사 : 영국 사례 [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
us-has-exposed-uk-governments-failure-to-implement-a-
long-term-food-plan-136911](https://theconversation.com/coronavirus-has-exposed-uk-governments-failure-to-implement-a-long-term-food-plan-136911).

부산형 통합돌봄 기본계획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박석환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장

I. 추진배경

- 초고령사회라는 인구구조 변화 뉴노멀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하고, 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시설 보호 체계를 벗어나 '커뮤니티 케어' 등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돌봄 체계의 필요성 대두

* 노인실태조사(2017) : 노인의료비는 전체의료비의 40.9%(노인1인당 의료비는 3배 수준)

** ('19.11, 보건복지부) 전체 요양병원 환자 44만명 중 선택적 입원환자 17만명(40%)

- 아울러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의 장기화 등에 따른 기존 돌봄체계 변화 등 고려

* ('20.12.30기준) 코로나19로 인한 누적사망자 879명 중 요양시설, 의료기관 등 집단거주인 사망자는 409명(46.5%) ⇒ 최초 사망자 및 대규모 발병지도 정신병동(청도 대남병원)

< 통합돌봄 주요 추진실적('19~ '21) >

- 정부 '통합돌봄 선도사업' 및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19~'21, 114억원)
 - ▶ 정부 선도사업 : 2개 구(부산진구, 북구), 부산형 시범사업 : 14개 구군
-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구성 운영('19.3~, 단장 : 행정부시장, 위원 18명)
 - ▶ 선도사업 지역 추진방향 등 자문, 연계기관 지원체계 구축 등
-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관리사업' 추진('19~'21, 1.1억원, 부산복지개발원)
 - ▶ 부산형 시범사업 구군 모니터링, 컨설팅, 성과 평가 등

II. 추진방향

- (15분 돌봄체계) 사는 곳 가까워서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원스톱돌봄' 창구 설치^{205개 읍면동} 및 지역 밀착 '돌봄서비스 지원 연계체계' 구축
- (부산형 통합돌봄) '통합돌봄센터' 설치확대^{5개소} 등 전달체계 구축, 지역 공유공간 '어울림센터'^{20개소} 조성, 돌봄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확대
- (일·돌봄·일상지원) 코로나 19 상황 '긴급돌봄', 돌봄 제공자 휴식 및 '전문상담, 교육' 지원 등 가족돌봄자의 '일-돌봄-일상'의 병행 지원

※ 정책체계('21~'24) ⇒ 5대 전략(22개 과제)

비전	부산형 통합돌봄체계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목표	‘15분 통합돌봄창구 인프라’ 확충	+ ‘돌봄부담’ 완화 및 ‘탈시설(병원) 자립생활’ 지원
추진 전략 및 과제	추진전략 (5개)	주요과제 (22개)
	1.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2)	1. 정부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원 2.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사업 추진
	2. 통합돌봄 제공 인프라 확충(6)	1. 원스톱통합돌봄창구 설치 확대 ⇒ 공약 2~3. 단기보호, 긴급돌봄 등 복지틈새 지원 ⇒ 공약 4. 식사·영양관리 시범사업 권역별 확대 5~6. ‘통합돌봄 교육’ 지원 및 ‘어울림센터’ 조성
	3. 서비스패키지 지원 및 돌봄부담 완화(6)	1. AI 기반 ‘스마트홈 서비스’ 지원 2. 통합돌봄센터 서비스패키지 식사, 이동지원, 동행, 방문의료 지원 3. 돌봄관계 욕구과약을 위한 ‘돌봄실태조사’ 추진 4~5. ‘방문진료’ 지원 및 돌봄활동가 양성 확대 6. 가족돌봄자 상담 및 전문교육 지원
	4. 탈시설(탈병원) 자립생활 지원(4)	1. ‘케어안심주택’ 확충 및 지원 2.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확대 3.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연계 4.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5.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4)	1.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단 활성화 2. 부산형 통합돌봄 관리사업 추진 3~4. 통합돌봄 BI 개발, 민관협력 추진체계 강화

III. 주요 사업내용 예산 : ‘21. 60억원 ⇒ ‘24. 127억원(4년간 369억원)

① ‘부산형 통합돌봄 시범사업’ 추진 등 부산형 커뮤니티케어 환경 조성('19~)

- (통합돌봄 선도사업) 2개 구, ‘Aging In Place’, ‘Happy Aging’ 등 시민의 보편적 삶을 실현하고 구군 통합사례관리 지원체계를 통해 통합돌봄 거버넌스 구축

(① 선도사업 부산진구, 북구 ~'22 ⇒ ② 통합돌봄 제공기반 구축, ~'25 ⇒ ③ 통합돌봄 보편화, '26~)

- (부산형 시범사업) 14개 구군, 정부 선도사업과 연계한 부산형 통합돌봄 모델 개발
(‘19. 2개구^{사하구,연제구} ⇒ ‘20. 2개구군^{수영구,기장군} ⇒ ‘21. 14개 구·군 전면 확대)

② 부산형 통합돌봄 조성을 위한 ‘원스톱통합돌봄창구’ 등 인프라 확충

- (통합돌봄창구) 사는 곳 가까이 돌봄수요 충족을 위한 ‘15분 원스톱통합돌봄창구’
(‘22년까지 205개소) 설치 및 주거약자 등에 대한 ‘케어안심주택’ 등 서비스 연계
- (복지틈새) 코로나 19등 돌봄공백 상황 발생 시 ‘긴급돌봄’ 및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돌봄 사각지대 대상, ‘24년까지 5개소 확충)
- (어울림센터) 사는곳에서 이웃과 함께할 수 있는 거점공간 조성 및 공무원,
돌봄 활동가 등 통합돌봄 전문교육 지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부산교육센터’ 연계)

③ 식사영양관리 등 ‘맞춤돌봄서비스’ 제공 및 가족돌봄 제공자 돌봄부담 완화

- (식사·영양관리)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한 ‘식사·영양관리
사업 연차적 확대(‘21. 1개소 ⇒ ‘24. 4개소) 및 AI, IoT 등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한
스마트홈서비스 확대(‘21. 4개소 ⇒ ‘24. 7개소, 500세대)
- 돌봄육구 파악을 위한 ‘돌봄실태조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돌봄활동가’ 양성 및 거동
불편자 등에 대한 ‘방문진료’와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지원 및 가족돌봄자 ‘상담, 교육, 자조
모임’ 등 지원 (‘21~‘24년, 가족상담 전문기관 7개소)

④ 장기입·퇴원자, 탈시설 장애인 등 지역사회 정착 지원(~‘24년 장애인 300명)

- (케어안심주택 확충) 탈시설(병원)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장기, 단기 등 돌봄 대상자 욕구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주거 및 돌봄서비스 지원
- (재가의료급여) 요양병원 퇴원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 등 퇴원환자 연계지원 사업 확대(‘21. 3개 구 * 매년 1개 구 확충)
- (탈시설 자립)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계획 수립 지원’ 및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연 60명,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요양병원 등 퇴원자 지역사회 연계 활동 지원 등

⑤ 부산형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지원체계 및 거버넌스 강화

- 광역 단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활성화, ‘시 - 구·군 통합돌봄 협의체’ 구성,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 ‘커뮤니티케어 관리사업’ 실시(부산복지개발원 공기관위탁, ‘19~)
- 부산형 통합돌봄 브랜드(BI), 네이밍 등 개발, 홍보 및 시민의 돌봄육구 파악 및 향후
부산형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돌봄실태조사’ 실시

IV. 기대효과

◆ 사는 곳 가까이 15분 원스톱통합돌봄창구 설치 확대

* 통합돌봄창구 : ('21) 106개소 ⇒ ('22) 205개소 * 인력배치(~'24)

▶ 욕구사정, 서비스정보 통합 안내, 서비스 신청 접수·대행 등

◆ 돌봄공백 상황 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단기보호시설 : ('22) 1개소 ⇒ ('23) 3개소 ⇒ ('24) 5개소

▶ '원스톱통합돌봄창구' 연계 및 돌봄사각지대 및 긴급상황 지원

◆ 장기입·퇴원자 및 시설 퇴소자 등 자립 지원

* 탈시설장애인 : ('21) 120명 ⇒ ('22) 180명 ⇒ ('24) 300명

▶ '케어안심주택' 지원과 돌봄 등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체계 구축 등

◆ 일·돌봄·일상의 병행지원으로 돌봄부담 완화

* 전문상담교육지원 : ('21) 1개소 ⇒ ('22) 3개소 ⇒ ('24) 7개소

▶ 돌봄소진 등 예방을 위한 '전문상담, 교육', 자조모임 등 지원

IV. 향후계획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추진 과제별(22개 과제) 시행계획 수립·조정을 통해 기본계획 실행력 제고
- 구·군 사업 컨설팅, 사업 중간평가 및 종합 성과평가 실시를 통해 추진과제 이행사항 점검 및 Feedback 체계 구축

○ 부산형 통합돌봄 추진 근거 마련(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

- 부산형 통합돌봄 지원을 위한 관련 조례, 통합돌봄 매뉴얼 등 제정 추진
- 주거·건강·의료분야 MOU, 토론회 등 협력체계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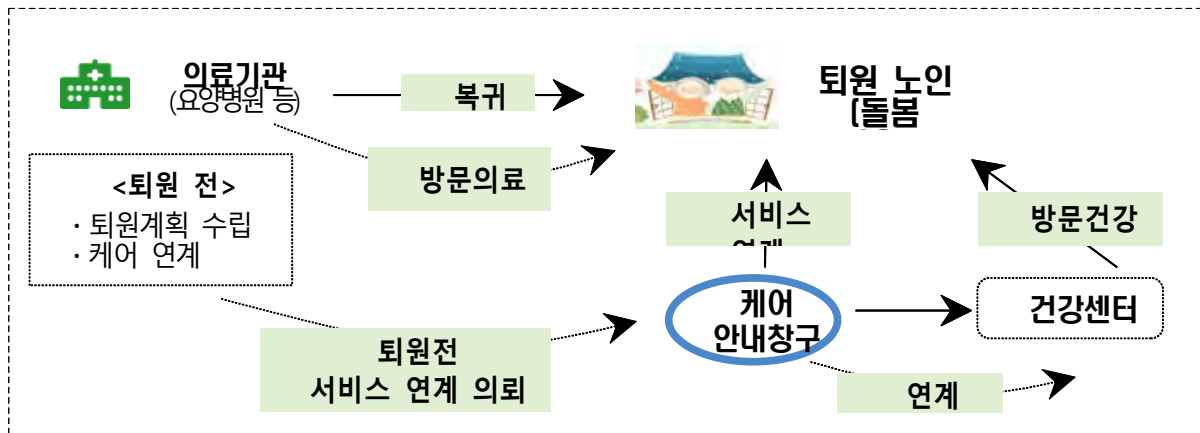
『참 고』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 통합돌봄) 핵심요소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 '18.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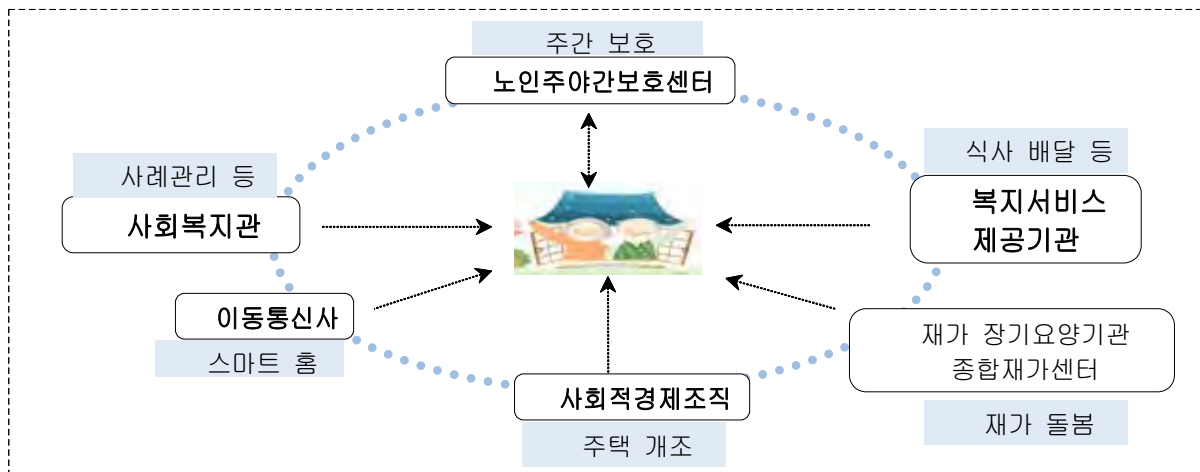
1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2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3 돌봄·요양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지원



4 지역자율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돌봄창구(읍면동), 케어회의(구군)

CH

[토론1]

소규모 공급체계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활성화

부천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사무국장 김재철

1. 먹거리기본권의 시대

먹거리 기본권은 건강한 먹거리의 적절한 확보를 시민의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면서, 지역성과 관계성에 중심을 둔 공공성이 강화되고 생태적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먹거리체계를 누릴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를 말한다. 과거 먹거리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었다면 전 지구적 기후위기와 사회적 양극화, 고령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현 시대의 먹거리는 국가를 포함한 공동체의 문제이며 생존의 문제가 아닌 질의 문제로 되고 있다.

2. 통합돌봄에서 먹거리 돌봄은 먹거리 기본권의 실현

급격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의 구축이라는 과제를 낳게 되고 시설보호 체계가 아닌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극대화하는 커뮤니티 케어로의 전환은 긍정적 정책전환이라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의료, 주거와 함께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먹거리 돌봄이다.

그러나 먹거리 돌봄은 여러 지역의 시범사업에도 불구하고 아직 걸음마 단계에 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간 기업부터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기업 형태의 조직들이 먹거리 돌봄에 함께 했지만 높은 배송비용 등의 이유로 인해 지속가능한 모델로서 평가받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숫자에 비해 너무 넓은 범위로 설정되는 지역은 기업에게는 비용 상승을 불러일으키며 결국 이러한 문제는 이용자 또는 지자체의 예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어떤 형태든 이윤을 추구해야하는 기업의 참여는 해당사업의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 여지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공의 책임성을 명확히 한 부산시의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3. 소규모 공급체계 확대

커뮤니티 케어는 ‘동네’,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이다. 전문적 영역에 속하는 의료를 제외한 주거와 먹거리 등의 문제는 철저히 동네와 마을에 집중해야 그 해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한 먹거리 돌봄의 한 대안으로 ‘마을부엌’으로 대표되는 소규모 먹거리 공급체계 확산을 제안하고 싶다.

다양한 이유로 먹거리 빈곤층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체부엌 또는 마을부엌, 공유부엌,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어린이 식당, 브라질 벨루오리존치 민중식당, 캐나다 밴쿠버 커뮤니티 기찬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회자되기도 한다.



그림1. 2018서울시 시정협치사업 ‘마을에서 함께나누고 더불어 성장하기’ 중

마을 부엌은 먹거리 빈곤층에게 식재료나 음식, 쿠폰 등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먹거리를 매개로 교육, 돌봄,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등 먹거리보장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이미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형태의 먹거리 조직(공간)이 존재하며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아직 민간 차원의 자발적 활동일 뿐 행정(국가)의 역할은 일부 보조금을 주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기 등 일부 지자체의 주도하에 전개되고 있는 마을부엌 사업은 아직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주목할 만 하다.

마을과 동네는 먹거리돌봄 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먹거리 수요가 발생하고 유통하는 장이기도하다. 조금만 둘러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경로당, 경로식당, 무료급식소 등 다양한 형태의 소규모 급식시설이 존재하며 노인, 학교밖 청소년, 임산부, 나홀로 가구, 저소득계층 등 사회적, 경제적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계층이 존재한다. 민간의 공동체 역량과 행정의 책임성이 결합하고 먹거리 돌봄이라는 시스템과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사업이 결합하는 공간으로서의 마을부엌은 지역공동체 사업과 공공급식 확대의 새로운 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다.

커뮤니티키친(온마을사랑채) 사업현황 및 개선안

한진숙

동의과학대학교 호텔조리영양학부 교수

지역사회통합돌봄식사서비스지원센터 고문

I. 커뮤니티키친을 통해 제공되는 식사·영양서비스는?

- 재가 노인의 개인별 식습관, 신체 및 질병상태, 구강건강(저작·연하)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영양관리 전담 영양사에 의한 개인 맞춤형 식단처방과 지속적인 건강 가이드 제공

II. 온마을사랑채(범전점) 사업현황

- 온마을사랑채(범전점) 운영 현황

운영기간	2020.8 ~ 현재(2020.7.28. 개소)
이용대상/규모	식사영양관리가 필요한 통합돌봄대상자* 중 159명(2021.9 현재) * 가야1동, 개금2,3동, 범전2동, 부전1동, 초읍동, 서비스동 외(2명)
이용금액	월 200,000원(1식* 8,000원) 지역사회서비스 사업 연계(본인 부담금** 4~10만원) * 오전·오후 간식 + 점심 ** 소득수준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름, 100%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경우도 있음)
제공서비스	영양관리(월 1회) + 식사지원(월 24회)
제공방법	회합식 및 거점·개별 배송 회합식 식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전면 비대면으로 도시락 배달* * 방문포장, 거점 배달, 가정 배달
제공인력	22명(필수인력 6명, 보조인력 20명) (필수) 센터장, 영양관리영양사, 급식영양사, 사무장, 조리사, 조리원 (보조)포장·배달 인력
소요예산	315백만원(운영비 200백만원, 배송지원 115백만원/ 국비 50%, 시비 40%, 구비 10%)
운영기관	동의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학교기업)

- 커뮤니티키친의 차별화 전략

- 계획부터 운영까지 민·관·산·학·연이 참여하여 식생활돌봄모델을 개발하여 전국 최초 커뮤니티키친(이하 키친) 구현

부산시	부산진구	동의과학대학교	(주)푸드머스	자활센터	자원봉사센터	엔컴(주)
운영 예산지원	사업총괄 운영지원	커뮤니티키친 모델 개발 및 운영 플랫폼 구축	식자재 공급 신메뉴 개발 고령친화식품 개발	배달	자원봉사단 운영	플랫폼 구축

- 키친 운영과 식사·영양관리서비스를 이원화하여 전문성을 확보



- 키친에 영양관리 영양사와 급식영양사를 배치하여 노인의 개인별 식습관, 신체·질병상태, 구강 건강 등에 따른 개인 맞춤형 식단제공 및 영양관리
 - * 제공절차 : 영양스크리닝 → 영양진단 → 영양중재(식사제공 및 모니터링, 영양관리) → 모니터링 및 평가 환류
- 노인의 식사특성을 고려한 메뉴분류, 조정이 필요한 메뉴, 사용금지 메뉴와 식단 작성시 고려사항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6주 사이클 식단 개발 및 적용으로 식품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식단구성

종류	구성	맞춤형 조절
일반식	- 노인의 식사 수용도를 고려한 식단 구성 - 다양한 식품군 - 노인 수용도를 고려한 조리법 (저작·삼김·소화 용이) - 저염, 저당 조미(助味) - 단백질 및 에너지 강화 - 간식을 이용한 섭취 영양소 조정 - 저영양상태로 식사량이 적은 대상자(열량보충을 위한 간식 제공) - 섭취량이 많은 대상자(비타민 및 무기질 위주의 간식 제공)	밥의 형태 반찬의 크기 음식의 익힘 정도 알레르기원 식품 약물로 인한 금지 식품 영양조정
질환식	의사가 질환 진단 후 식사처방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	

- 식단 예시



- 식사·영양관리를 위한 데이터기반 플랫폼 개발 및 안정화 (동의과학대학교 LINC+ 사업)

III. 문제점 및 개선안

- 키친의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범전점에 적용하여 1년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도출하여 개선안 마련
 - 대상자 선정, 키친의 위치와 사업 형태
 - 개발 식단 적용시 문제점과 질환식 적용의 어려움
 - 코로나 19로 회합식이 아닌 배달서비스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도시락의 안정적인 배달과 관련하여 나타난 문제와 비대면 식사모니터링과 영양관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 키친 모델 확산과 이용자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노력
 - 키친의 재정적 자립을 위한 방안 모색 필요

이름표를 이용한 주간모니터링 예시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성함

【이름표를 이용한 주간모니터링 예시】



【월간 모니터링 자료】

IV. 향후 추진

- 시장화를 위한 규모확대, 판로 개척, 마케팅, 제공기관·전문인력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온마을 사랑채(초읍점) 개소 예정(2021. 12)
 - 신축 커뮤니티하우스 도란도란 2층
 -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벌크 배달 중심)

공유공간 ‘만덕어울락’과 북구 먹거리 돌봄사업 사례

만덕종합사회복지관 정신모

들어가며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 부산의 북구, 진구 그리고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발제문을 통해 지역사회통합돌봄과 먹거리에 대한 내용에 공감하면서 부산 북구의 먹거리돌봄과 공유공간 만덕어울락에서의 활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사회통합돌봄영역에서 먹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역할과 향후 정책적 접근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한 먹거리 돌봄

북구 내 사회적경제조직이 먹거리 돌봄서비스 주체로서 역할을 수행 할 수 있게 부산형 OK 일자리지원사업을 통해 전문 교육 및 컨설팅, 서비스 개발 등 제공기반을 마련하였고, 북구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시행에 따라 먹거리 돌봄서비스 제공하고 있음.

북구 지역사회통합돌봄 돌봄서비스는 개별 건강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식을 직접 만들어 어르신가정에 직접 전달해 드리는 ‘어르신 영양 보드미’ 서비스와 가사지원의 일환으로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식사를 직접 만들거나 식사준비를 해드리는 ‘돌봄 채움’ 서비스가 사회적경제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어르신 영양 보드미’ 서비스는 미더덕협동조합과 부산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돌봄 채움’ 서비스는 북구지역자활센터와 희망터지역자활센터가 각각 북구 권역을 나누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단순히 식사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행인력에 의해 어르신의 건강상태 및 정기적인 안부확인을 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개인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하기에 만족도가 매우 높음.

	
영양식 조리	영양식 배달
	
영양식 도시락	식사준비

2. 어르신을 위한 공유공간 중심 먹거리 돌봄

· 지역주민 중심(구포 새뜨락커뮤니티센터)

북구 구포2동에 위치한 새뜨마을 내 지역주민을 위한 공유공간 새뜨락커뮤니티센터가 마련되었고, 주민들로 구성된 새뜨마을공동체가 주민교육 및 회의,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 등 활발하게 운영되었음. 공유공간 운영되면서 지역 어르신들과 교류도 많아졌으며, 그 과정에서 혼자서 식사해결이 어려운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밥상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음.

매주 1회 30여명의 어르신을 위해 새뜨마을공동체 주민들이 직접 식자재 준비부터 음식 조리, 식사를 준비하여 이웃끼리 정겨운 밥상을 만들어 가고 있음.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함께 식사가 어려울때는 식사도시락을 만들어 가정으로 전달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있음.



식사도시락 준비



공동밥상

· 어르신 당사자와 돌봄활동가 중심(만덕 어울락)

북구 만덕2동에 위치한 어르신을 위한 공유공간 만덕어울락 공간을 조성하였고, 어르신들이 공유공간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돌봄활동가가 상주하여 공유카페운영,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공간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식사해결의 욕구가 많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돌봄활동가와 어르신이 함께 만들어 먹는 밥상공동체를 만들게 되었음. 만덕어울락 밥상공동체 ‘어울리는 한끼’는 남성 어르신들이 많은 편이며 밀키트나 간단한 레시피를 활용하여 어르신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보고 음식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음. 코로나19 상황으로 함께 식사는 하지 못하지만 함께 만든 음식을 이웃에 가져다주며, 스스로 먹거리 돌봄과 더불어 이웃 돌봄까지 실천하고 있음.



음식 조리



음식 나눔

3.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의 먹거리에 대한 제언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먹거리는 중요한 요소이며 서비스이자 돌봄을 완성하는 매개체이다.

통합 돌봄의 핵심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 한 공공서비스의 지원과 대상자 중심의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문화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다.

먹거리를 단순한 돌봄서비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사회적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서 그리고 사회적 활동의 역할 또한 가지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통합돌봄에서 영양을 기초로 한 돌봄서비스이기도 하지만 사람을 관계 맺기 위한 중요한 매개체로서의 역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식생활을 통한 사회적관계와 활동에도 중요한 지점이 존재하며 향후 먹거리 돌봄을 위한 정책에도 녹아내어야 한다.

우리는 먹거리 돌봄을 통해 가장 편한 곳은 ‘내가 사는 마을’과 ‘집’이며 그곳에서 실현되는 노후가 바로 돌봄이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가장 큰 바람이다. 삶이 시작되고 끝을 맺는 순간까지 모두 담아내는 공간에 ‘이웃’이 더해졌을 때, ‘돌봄’이 완성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방향성은 개인의 욕구에 기반한 보편화된 공공서비스에 가장 편안한 공간과 사람이 함께 관계하고 활동하는 이웃을 더하는 것에 동참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 중심의 먹거리 돌봄 활성화 제안

기업(단체)명	마을부엌 '정지'	대표자명	전우철 / 김광수
연락처		이메일	jeonwoochul0515@gmail.com
조직형태	☐ 비영리민간단체 ☐ 비영리법인(등기) ☐ 영리법인 ☒ 개인들의 모임		
법인등기(유/무)	☐ 유 ☒ 무	사업자등록(유/무)	☐ 유 ☒ 무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만덕 일원		
업종	마을 밥상 / 로컬푸드를 이용한 취약계층 도시락 사업 / 꾸러미사업		
신청분과	☐ 친환경 창업 ☒ 도시재생·마을관리·돌봄 ☐ 기타(사회혁신) 창업		
주된 사업내용 (요약)	소셜미션 및 비전 소셜 미션 : 시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먹거리, 행복하고 건강한 부산 비 전 :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먹거리 제공 (식품꾸러미 사업 및 도시락)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의 복원		
	주요 상품 또는 서비스 식품 꾸러미 사업 (취약계층 양곡지원 및 친환경 꾸러미 지원) 도시락 사업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 로컬푸드를 이용한 반찬 정기 구독 사업		
	주요사업 친환경 꾸러미 / 주2회 수요자 가정 배송 건강 도시락 / 주5회 취약계층 가정 배송 반찬 정기 구독 / 월10회 조합원 가정 배송		
	사업목표 (기대효과) ※ -(사회적) 1.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 2. 로컬 푸드를 이용한 식품 개발로 로컬 푸드 이용율 제고 3.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 복원 -(경제적) 1. 매출창출로 지역 내 취약계층의 일거리 창출 1. 수익을 공익적 목적에 환원함으로 공익적 목적 실현 (기 공동체와 연계)		

□ 기업(단체) 소개

기업(단체)명	덕천만덕마을부역-정지	대표자명	전우철 / 김광수
홈페이지 또는 SNS			
기업활동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 1-1. 먹거리 취약계층에게 ‘좋은 먹거리’ 제공 ☐ 취약계층 식생활의 특징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소급자의 50.3%는 불규칙적인 식사를 실시 ○ 점심 또는 저녁 식사의 경우 편의점과 포장마차 등 길거리에서 식사하는 빈도가 높음 ☐ 취약계층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기반조성 ○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함께 식사를 하거나, 요리를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여, 건강한 식습관 개발과 실천을 강조하고, 먹거리 복지 관련 기능을 수행 ○ 도시농업, 돌봄, 도시락 제공등 다양한 먹거리관련 활동과 연계해 설치하는 것이 중요 1-2. 로컬 푸드를 이용한 식품 개발로 로컬 푸드 이용을 제고 ☐ 부산시민의 지역먹거리에 대한 관심,신뢰 부족 ○ 부산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대상자의 59.9%가 부산에서 생산된 먹거리를 우선적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 부산시민은 로컬푸드를 접할 수 있는 접촉면이 부족한 상황 ☐ 로컬푸드 일상 소비를 확대하여 지역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 ○ 꾸러미 사업 - 제철 농산물 꾸러미방식을 로컬푸드와 접목한 로컬푸드꾸러미, ○ 취약계층 건강도시락 사업 (로컬푸드 적극활용) ○ 로컬푸드를 이용한 ‘반찬 정기 구독 서비스’ 1-3. 행복하고 건강한 마을 공동체 복원 ☐ 먹거리를 통한 마을단위 공동체성 회복 ○ 급격한 산업화, 경쟁심화로 개인들은 삶의 공간, 쉼의 공간인 마을에서 고립되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 ○ 개인고립을 극복하고 주민과의 상호교류와 자치활동을 통해 마을단위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들어가고 함 ☐ 먹거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 ○ 전형적인 복지서비스의 대상이었던 독거노인, 결식 아동, 기초수급대상자 이외에도 청년, 1인 가구, 젊은 부부, 주거불안자, 맞벌이 가구, 결혼 이주여성 등 사회적 문화적 요인에 따른 먹거리 미보장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음			

□ 대표 활동내용

□ 지역 내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회적 문제

○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 각종 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혜택이 취약계층에게 중복지원되고 있어 다양한 복지를 누리지 못함
- 취약계층에게 주어지는 먹거리의 대부분이 인스턴트식품으로 지원
- 취약계층 아이들과 노인들의 경우 좋은 먹거리와 규칙적인 먹거리를 제공받을 확률이 떨어짐

○ 공동체의 회복

- 사회활동에 대한 인식부족의 변화를 가져옴
- 다양한 계층의 협업으로 사업의 기대효과를 극대화
-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돌봄으로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마중물 역할
- 취약계층의 식생활 안정화를 통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존감을 높여 적극적 사회활동 기대효과

□ 지역 내 활동 경험

- 만덕&마을교육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역공동체 즉, 마을어른들에게서 배우는 다양한 교육과 유대관계를 통해 마을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게 되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게 됨
- 공모사업이 선정됨으로서 다양한 지역활동과 업무경험을 토대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기업의 아이템 구상

□ 취약계층 건강도시락과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의 기대효과

- 위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 보장
- 사회적 문제의 일부를 해결함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역할에 충실함
- 다양한 지역으로 확장되어 프랜차이즈 계발과 육성
- 공동체의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 만들기에 마중물 역할

지역사회 사회적경제 조직을 활용한 먹거리돌봄 활성화 제안

한살림부산생활협동조합

이사 이정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다양한 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통해 부산지역의 돌봄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저희가 나누고 싶은 통합 돌봄의 주제는 수요자 중심의 돌봄과 존중이 갖는 돌봄입니다.

한살림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거래를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유기농 먹거리를 지켜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시대적 과제인 공동체의 돌봄서비스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국의 한살림 공동체 내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소개할 내용은 한살림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 고랑 나눔 운동입니다. 한 고랑 나눔 활동을 위해 한살림 물품 생산지인 부안의 산들바다 공동체에서 제공해 주신 단호박 20kg으로 조합원들이 단호박 식혜를 만들어 장애인 재활과 교육 시설을 운영 중인 세곡동 성모자애복지관에 전달하였습니다.

한살림 생산지의 잉여 생산물들을 도시 지역의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하여 생산자에게 도움이 되고, 지역공동체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을 위해 논의가 구체화 되면서 새로운 관점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야 말로 안전과 영양적 측면에서 양질의 먹거리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한살림에서 제공하고자 하는 농산물의 경우 잉여 농산물이라 하더라도 품질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만큼 쓰고 남은 것을 나눈다’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돌봄 서비스 공급 주체의 입장이 훨씬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돌봄의 주체로서 행위를 하는 것에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급주체가 돌봄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것이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봄서비스는 전적으로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이 충분히 존중받고 배려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살림에서는 잉여 농산물의 나눔을 시작으로 기획되었지만 실행을 위한 준비단계에서 다양한 의견 나눔을 거치면서 생산지에서 돌봄을 위한 나눔에 사용할 물품을 위해 한 고량을 미리 확보해 두어 양질의 물품으로 돌봄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행됐습니다. 이를 통해 수요자들은 돌봄서비스를 통해 물질적 돌봄의 측면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돌봄 또한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먹거리 나눔을 통한 돌봄서비스는 특별하다고 할 것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기관 및 민간 기업에서 식자재 또는 음식 나눔을 통한 돌봄 서비스는 이미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한살림의 한 고량 나눔 운동을 준비하면서 진행된 논의과정을 공유하면서 돌봄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나누고자 하는 본질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현재 한살림 부산 이사회에서는 적극적인 돌봄사업 진행을 위해 TF팀을 꾸려 준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생명존중과 돌봄의 한살림 정신을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써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살림이 건강한 먹거리 물품 거래를 중심으로 모인 생활협동조합인 만큼 지역사회 푸드플랜과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좀 더 적극적으로 여기 모인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통합돌봄 기본계획’ 연계
먹거리 돌봄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